

# 코로나19가 저소득국에 미친 영향

방형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해 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국경이나 소득 수준, 지리적 인접성 등과 무관하게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 퍼져 나갔다.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각국이 국경 봉쇄조치나 자국 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야간 영업과 통행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는 등,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가 시작된 이후 1년여가 훌쩍 지났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 백신이 생산되고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나,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와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제약회사들이 고소득 국가에 주로 있다 보니, 자국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으로 인해 저소득 국가에서는 낮은 접종률로 여전히 사회적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봉쇄 조치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는 대부분 국가의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고소득 국가의 경우, 재택 근무나 원격수업과 같은 비대면 접촉을 늘렸고, 지난 20여년 간 조금씩 도입되던 원격 근무가 적어도 사무직 노동자들에게는 한순간에 일상적인 상황으로 다가왔다. 비단 근무나 수업 환경뿐 아니라, 식당에서 외식을 즐기는 기존의 식도락 문화나 생활체육 및 여가생활이 중지되거나 비대면으로 바뀌었으며, 새로운 온라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사회활동도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매일 출근하기 위해 필요했던 화장품 및 일부 의류 산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비대면 사회에 필수적인 각종 IT 기기에 대

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요식 업계에서도 매장의 종업원 수는 감소한 반면 배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배달업 종사 인력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각국에서 전개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새로운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앞서 살펴보았듯 기존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노동시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실업률과 고용률로 집계되는 산업별 고용 규모나 총고용량과 같은 양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원격근로 유무, 임금, 자율 출퇴근제 등 근로의 질적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의 원인이 비단 사회적 봉쇄 조치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각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해외여행 자제를 권유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취하면서, 교역 시설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교역이 차단됨에 따라 19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던 국제 교역도 줄어들었다. 천연자원을 수출하고 식량을 수입하던 일부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 국가나, 일차 생산물을 수출함으로써 석유 등의 필수 원자재를 수입하던 일부 국가들에 이러한 무역 감소 및 국경 봉쇄 조치는 치명타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앞선 의료 기술과 많은 의료 인력을 확보한 고소득 국가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집계, 현황 파악 및 대응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열악한 의료시설, 행정력 미비 등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한 저소득 국가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화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점 때문이다.

첫째, 당분간은 백신이 고소득 국가 위주로 보급될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에서는 한동안 코로나19의 영향이 계속될 것이다. 몇 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코로나19 백신이 다수의 국가에 보급되면서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고소득 국가에서는 곧 실현될 미래인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당분간 감불생심(敢不生心)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 대외 교역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저소득 국가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둘째, 고소득 국가보다 저소득 국가가 경제적 특성과 산업구조 및 일자리 구성 등에서 좀 더 분명한 특성을 대변한다. 농업을 비롯한 1차 생산물을 주로 교역하는 국가, 중개무역을 하는 국가, 내수 위주의 국가 등 저소득 국가라 하여도 특성이 다양하며, 고소득 국가와는 달리 경제 전반이 고루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특성이나 산업별로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해는 향후 유사한 규모의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별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향후 대외 교역에 있어 특정 국가에 대한 편중도를 완화하고 교역 선을 넓히며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타국에 대한 이해의 측면 외에도,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의 소집단별로 받을 충격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실험 결과로 해석하여 향후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산업별, 계층별, 사회·경제적 집단별로 효과적인 위기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호에서 살펴볼 국가들은 에티오피아, 레바논, 러시아이다. 에티오피아는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커피와 까트, 수산물 등 주로 1차 산업 생산물을 수출하여 공산품을 수입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경 봉쇄 조치 이후 한동안 에티오피아는 자국 내 농산물을 수출하지도 못하고 필수적인 공산품을 수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레바논의 경우 중개무역이 발달하고 관광업과 인력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 코로나19와 함께 최대 무역항인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실상 고강도의 국경 봉쇄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러시아의 경우, 다른 저소득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으며 각종 데이터가 잘 축적되어 있고 영토가 넓어, 지역별로 사회적 봉쇄 조치가 얼마나 강도 높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본호에 실린 러시아 사례의 경우, 러시아 각지의 야간조명이 코로나19 이후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통해 지역별 봉쇄 조치의 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사회적 봉쇄 조치가 지역이나 산업, 노동시장 구성, 그리고 임금 수준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는 흥미로운 기고문이다.

코로나19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적어도 백신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국제 교역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은 명약

관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교역하지 않는 저소득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나 주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당 국가들의 실상에 대해서는 도외시해 왔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고, 코로나19 대응에서 저소득 국가의 여러 조치와 노력,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을 고찰하는 것은 비단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 외에도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은감불원(殷鑑不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LI**